

□ 토막소식

◇ 생활노래마당=1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서울 기독교청년회 대강당,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노래와 놀이 지도. 738-3667.

◇ 시민운동학교=16일~11월11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흥사단 강당. '한국사회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방향' '생활속의 시민운동' 등 강의. 흥사단 주최. 747-7684.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평화주간행사=17~25일 전국 걸스카우트 지구.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주제 아래 평화캠페인 실시. 733-5893.

◇ 가정복지세미나=17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 서울시, 한국가족학연구회 주최. 주제 '한국사회의 자녀교육열과 가족의 대차방안'. 215-7253.

◇ 청소년을 위한 사이코드라마=17~18일 오후 1시 소극장 예. 한국임상예술학회 주최. 참가비 5만원. 760-5138.

◇ '주부-생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한국부인회 주최.

"주부 재산권 보호" 93.9.16 여성계, 세법개정 나섰다

"배우자간 상속·증여세 폐지" 결의

금융실명제 실시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와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가 세법개정에 발 벗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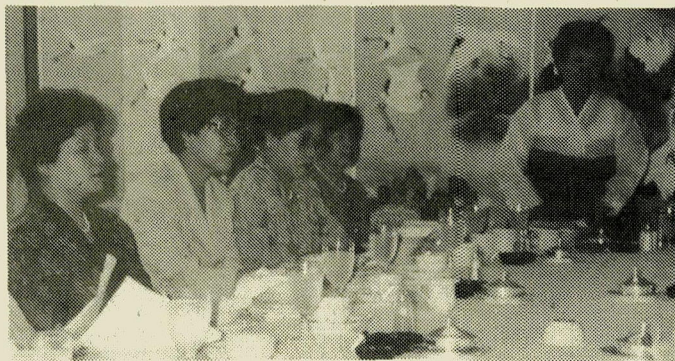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17개 여성단체는 지난 13일 '남녀평등한 세제개혁을 위한 여성단체모임'(가칭 세제개혁모임)을 발족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세법에 '배우자 사이의 증여세와 상속세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연대운동을 펴기로 결의했다.

세제개혁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여성정치연맹 김정례 총재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혼인의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지적하고 "혼인중 이혼 재산은 부부 공동의 소유인데 배우자간에 증여·상속세를 물리는

것은 잘못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무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증여액의 경우 3천만원+(결혼횟수×3백만원) △상속액은 1억원+(결혼횟수×1천만원) 한도는 세금이 공제되고, 이를 넘을 때는 10~55%의 세금을 내도록 돼있다. 이는 현행보다 공제폭을 다소 늘렸을(증여세 연간 1백만원에서 3백만원, 상속세 연간 5백만원에서 1천만원)뿐 배우자간의 증여·상속세 부과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같은 재무부의 세법개정안은 "배우자간의 증여·상속세 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여성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처럼 호도하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김숙자 부소장은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와 재산권을 정당하게



'남녀평등한 세제개혁을 위한 여성단체모임' 발족식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배우자간 증여·상속세 폐지 관철"을 다짐하고 있다.

평가하고, 배우자간의 증여·상속세 부과는 즉각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법학자인 김 부소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는 증여·상속세의 세금징수가 어렵고, 아내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탈세수단이 된다는 점을 들어 배우자간의 증여·상속세를 물려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금융실명제가 실시돼 모든 세원으로부터 세금징수가 이뤄지고 종합과세도 실시돼 배우자간의 재산이동에 대한 탈세는 염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연히 배우자간의 증여·상속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김 부소장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혼시 분할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개혁모임은 정기국회에서 여성계가 요구하는 세법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일차로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여자기독교청년회관(YWCA) 강당에서 '남녀평등한 세제개혁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남녀평등한 세제개혁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을 상대로 세제개혁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국회에 세제개혁 청원서를 내는 한편, 각 정당에 배우자간의 증여·상속세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낼 방침이다.

신연숙 기자